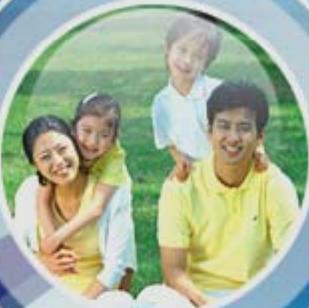


국가균형발전정책

평가와 과제

2007. 9

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
국가균형발전정책 기본구상

균형발전정책

□ 수도권권의 과밀해소 ⇒ 분산정책

- 행정기관이전
- 공공기관의 지방이전
- 기업의 지방이전

□ 지역별 특성화 전략 ⇒ 특화정책

- 지역전략산업육성
- 클러스터정책
- 지방대학육성
- 지방 R&D 확대

기본구상 단계의 고민

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

- Time-lag 문제
- 수도권확장론 V 균형발전론
- 공공부분 이전 우선론
- * 비수도권 총량제(?) - 권역별

광역경제권과 행정권역의 문제

- 수도권 V 광역경제론(동남권 등)
- 광역경제론의 어려움
- 시도단위 정책의 난점

분산정책

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

- 2011년 까지 행복도시 건설완료, 2012년 부터 본격이전
- 2007.7 착공식 본격화

●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

-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중 178개(직원수 3만2천명)을 10개의 혁신도시에 배치
 - *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85%('04) → 35%('12)
- 각 지역별 성장거점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

● 기업도시 건설

- 낙후지역 및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큰 지역에 민간투자 촉진
- 기업주도의 도시건설 추진
- 6개 시범지역 선정(무안, 충주, 원주, 무주, 해남, 태안)

클러스터정책

- **대덕연구단지 V 산업단지(국가/지방/농공단지)**
 - 연구 R&D V 단순생산
- **대덕 R&D 특구**
 -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중점 / 생산기능의 강화
 - 특구지원법 / 연구소 기업 / 투자펀드조성(1,000억원)
- **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**
 - 7대 시범단지 및 추가계획(연구개발/ 인력양성에 중점)
창원, 구미, 울산, 시화, 광주, 원주, 군산
(녹산 등 2~3개소)
 -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
 -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과 연계

지역 산·학·연 강화정책

● 지역전략산업 육성

- 시도별로 특성화된 4개 전략산업 지정 육성
-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도화
- 기술개발, 인력양성, 기반구축, 기업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 지원 기능

● 지방대학 육성

-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 / 지역전략산업과 연계
- NURI사업 / 산학협력 중심대학 / 산학협력단
- NURI사업 V BK사업(학부생 V 대학원생)

● 지방 R&D 투자확대

- 정부 R&D 예산의 지방 비중 확대('03년 27% → '07년 40%)
- 지방정부 R&D 예산 비중 확대(역매칭방식)

지역개발정책

- **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**
 -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발
 - 87개 지역을 지역(규제)특구로 지정
향토자원/ 교육/ 의료,사회복지/ 산업, 유통 등
- **신활력사업 추진**
 - 낙후된 70개 시군 지정
 - 농산어촌 RIS/ 1·2·3차 산업의 융·복합화
 - 농업문제 → 농촌문제화
- **살기좋은 지역만들기**
 - 특화된 지역공동체 복원운동 지원
 - 살기좋은 농촌/ 도시 만들기, 가고 싶은 섬 만들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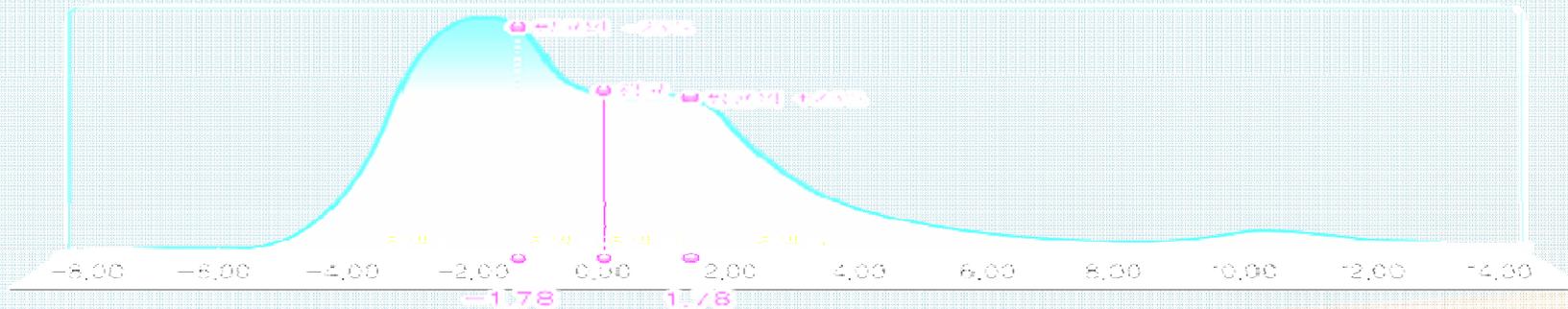
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

● 지방기업 애로사항 조사

- 대한상의, 2006.11월
- 전국 541개 기업(수도권 198, 지방이전 기업 202, 지방창업기업 141)
- 공장용지/ 인력수급/ 조세지원

●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요인 제공

- 2대 부문, 14개 과제(법인세경감, 산업용지, 인력수급대책)
- 지역분류 제도화와 인센티브 차등지원
[낙후/ 정체/ 성장/ 발전지역]



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

종합적·안정적 추진

지역의 자율성 확대

기구

국가균형발전위원회
지역혁신협의회

제도

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
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

국가균형발전특별법

향후과제

- 지방분권 v 균형발전의 문제
 - 참여형분권 v 자유시장형 분권
 - 지방분권과 광역경제권
 - 지방분권과 거버넌스
 - 분권형 균형발전

- 교육자치와 초·중등 교육의 문제

- 균형발전정책의 지속성 문제

- 한반도 균형발전의 문제